한국 언론의 고질, 정파성

조항제 (부산대학교)

1. 들어가며

- 강의의 목적은 한 책상물림의 '의견 공유' 의도
- 관점은 '현실에 집중하는 비교'(realization–focused comparison)(Amartya Sen)
  - '현실'과 '비교'의 관점은 이상적인 정의의 함양(롤즈)보다는 현실적인 부정의의 극복을, 초역사적 최선보다는 비교 사회적 차선을 선택하게 함
  - 이상적 '최대주의'보다는 현실적 '최소주의' 선택
    : 실제 언론(인)들이 '할 수 있고'(가능성), (다른 부문이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수행, 관행), '하려 하는'(의지, 언표) 부분에 집중
  - 어떤 성향의 유무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과도하냐, 그렇지 않느냐', 언론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정도로 '문제가 되느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냐'에서 문제를 찾음
    eg. 유럽의 경우, '극단적이냐'(polarized), '보통이냐'(moderate)에 따라 '극단화된 다원주의' 모델과 '민주적 코포라티즘' 모델이 갈림: 상대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갈림
    eg. '극단'과 '보통'을 결정하는 것은 언론과 수용자,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음: 언론-전문직주의의 수준

2. 한국 언론과 정파성: 정파성을 보는 문제의식

- 정파성의 정의
  - '정파'가 '정치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따로 모인 무리'이므로 정파성은 이 이해관계에 따른 성향, 또는 이 이해집단과 관련된 성향임
  - 언론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정치인 점으로 미루어 문제로서 정파성은 정치성 자체보다는 이 정치성이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완전히 한 쪽으로 치우친 '편향'(bias)이 될 때를 말함 (이 점이 내가 보는 problematic)

    eg. "보수적 신문은 나름의 의견을 내고, 사회주의 신문은 이에 명확하게 반대한다. 둘 다 옳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영국, 언론평의회): 과연 여기에서 옳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 관건은 단순히 보수/진보, 성장/분배, 신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여/야를 표방하는 언론의 정치성이 아니라 당대의 기준에서 벗어난 편향(편향 여부는 우리 스스로 결정)

2. 한국 언론과 정파성: 정파성을 보는 문제의식

- 사례 1: 노회찬 의원의 '아내 전용 운전기사' 보도(조선일보 2018. 7. 21)
  - '아내의 운전기사로 선거 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국민일보 2018. 4. 16)
  - '전용 기사'(자유한국당)
  - '운전기사'와 '자원봉사자' 혼용(유튜브와 소셜미디어)
  - '아내 전용 운전기사' 기사(조선일보 2018. 7. 21): 전형적인 '허위정보조합'
  - '선거 운동 20일간의 운전 봉사 도우미'(정확한 fact)

- 원인: '언론사와 기자의 잘못된 신념, 곧 정파적 '악의'가 부실 관행과 결합해 낳은 총체적 산물'

① 기자 개인의 선입견 또는 시각: 보수 또는 반진보당

"10일이든, 20일이든 그 기간은 어쨌든 전용기사 아니냐"

"(운전 수고에 대응해, 정당한 보수의) 돈을 안 받은 것이 더 문제"

2. 한국 언론과 정파성: 정파성을 보는 문제의식

② '저널리즘문화'로 부를 수 있는 보도 관행: 허술한 검증절차, 해당 피영향자(all those affected)의 반응 무시, 강령이나 지침의 취약성

cf. 한국언론은 '제도적 역할' 부분에서 '개입적'(반대는 '수동적')

'권력과의 거리'에서는 '적대적'(반대는 '충성적')

cf. 반대편에 대한 적대가 같은 편에 대한 충성보다 강함

'시장에 대한 태도' 면에서 '소비자적'(반대는 '시민적')

cf. 공공선에 대한 의식이 좀 더 약함

③ 조직(통제, 위계)의 성격: <조선일보>(보수적 신문, 이를 노골화한 신문/ 위계가 강한 신문)

④ 정파성이 가진 소비자에 대한 시장성: 같은 편 독자의 속을 풀어주는 이른바 '해장국 언론'의 만연(강준만)

cf. 일면적 주창저널리즘이 판을 치게 되면 오히려 중립적 언론은 정직하지 않다는 인상마저 줄 수 있음

cf. <조선일보>의 같은 편은 물론 '보수-중장년-중산층-서울(강남)'

cf. 시장의 '엄명'은 '더 세게, 더 강하게':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의 선정성

2. 한국 언론과 정파성: 정파성을 보는 문제의식

⑤ 반정치 · 반부패에 대한 뿌리 깊은 여론: 노회찬 금품수수 건

cf. '떼거리(herd, pack) 저널리즘', 선정주의

⑥ 한국 언론의 전체적 보수성(중산층 경향성)

cf. 1987년 민주화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특종 및 6 · 10 항쟁에 보인 일부 호의적 보도와 그 해 7 · 8월의 노동자대투쟁 당시 보여준 극렬한 반대 또는 허위정보 유포 사이의 대조

- 사례 2: '윤석열 접대' 보도(<한겨레>, 2019. 10. 11)
  - <한겨레>는 출처인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가 된 문구("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본 것인 양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도
  - 위의 여섯 가지 원인 중 몇 개나 해당할까요?
    : ③ 일부와 ⑥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해당될 듯

2. 한국 언론과 정파성: 정파성을 보는 문제의식

- 초정파적 미디어(hyper-partisan media)가 갖는 보편적 문제점
  - 정치 지도자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개인화', 준칙을 아랑곳하지 않는 '나쁜 매너', 논리를 무시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감정주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는 '단순화', 객관화와 사실을 피하면서 노골적으로 당파성을 보이는 '극단화', '초'극단적으로 당파적 저널리즘을 조장하는 '극심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 소비자나 배급자로서 '일반 국민'(the people)에게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어필하면서 주류 미디어나 정당에 대해 적대적인 '반권위성' 등
  - 특히 개인화·단순화·극단화·극심화는 특정한 '선택'과 결합할 때, 더 큰 문제를 낳음. 한국 언론이 논의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인 정파성이 바로 그 전형
  - "폭력적인 집단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또 현존하는 갈등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신생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와 정치의) 병행은 혼란을 조장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불안정을 조장하는 분할된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Voltmer, 2013, p.226; 괄호는 인용자)

3. 정치병행성

- **정치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은 '정당과 언론이 소유 · 조직적 연계, 주요 언론인의 정당 참여나 정치 성향, 수용자의 정치 성향 등에서 연계를 맺어 이념이나 논조에서 공동보조(병행)를 취하는 일종의 정치–언론 연합(coalition) 현상'**

  - '미디어와 정당 사이의 연계의 정도와 성격이며, 더 넓게는 미디어체제가 사회 내 주요한 정치적 분할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하는 정도'(Hallin & Mancini, 2004, p.21)

  cf. 소유나 재원 차원의 구조적 제휴보다 시장 전략 차원에서 '다변화와 분점을 노린 이슈나 논조', '소유주나 대표 언론인의 정치적 신념', '주 소비자층의 지지 정당 · 이념'과 연계된 공조가 많음

  cf. 정당은 그들의 지지자들이 읽는 언론의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대로 언론은 자신의 독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메시지에 크게 신경 씀: 정당과 언론이 분화된 시장(수용자/광고주)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

3. 정치병행성

- 정치 병행성은 병행 자체보다 병행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비교 기준으로 활용됨

  cf. 유럽 내에서 병행은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들에 공통된 현상이고, 정작 유형을 가르는 차이는 병행하는 정치-미디어 쌍들 사이의 갈등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임. 즉, 이 갈등이 '보통이냐'(moderate), '극단적이냐'(polarized)가 '민주적 코포라티즘'과 '극(단)화된 다원주의'를 가르는 것임

  cf. 정치 병행이 나타나지 않는 나라는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정도임. 한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을 본받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언론은 미국과 반대로 발전했음. 그러나 그 미국 역시 최근에는 유럽과 비슷해지면서 이전의 자유주의에 '극(단)화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혼종 모델, 이른바, 극단화된 자유주의(polarized liberalism)로 바뀌어 감

- 이런 병행은 근절되어야 할 병폐로서 거론되는 편향과는 의미가 사뭇 다름. 정치 병행성은 다원주의를 진작시키거나, 정치적 참여를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장려될 수도 있기 때문임

3. 정치병행성

- **그러나 정치 병행성은 때로 많은 문제를 낳음**
  - '충분히 경쟁적인 정치 체제'에서가 아니면, 곧 시장을 독점하는 언론이 기득권 정당과 공조할 경우에는 '지배'의 효과가 나타나(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다) 다원주의를 해침
    eg. 브라질 주류신문과 노동자당의 경우(Albuquerque, 2013): 호제프의 탄핵과 주류신문
  - 언론과 정치 사이의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병행의 패턴이 꾸준하게 나타날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음: 언론이 경우에 따라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다가성(polyvalence)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뜻임
    eg. 타이
  - 정치 병행(연합)의 쌍 사이에 갈등이 극단적이라면 오히려 정치 병행성은 더 많은 해악을 낳음. 갈등 관리의 수준과 정치 병행성의 긍정적 효과는 비례적

3. 정치병행성

- 정치 병행이 양상은 유사하더라도 성숙한 민주체제와 그렇지 않은 체제에서의 효과는 완전히 다름

  cf. 정치 병행을 측정하는 세부 지표로는 '뉴스와 논평의 분리 여부', '언론에 대한 정치의 영향과 언론의 정치적 주장', '언론인의 정치적 성향', '미디어-정당의 소비와 지지의 병행성', (쟁점 보도에서 보이는)'정치적 편파성', '공영방송의 종속성' 등 여섯 가지 등을 꼽을 수 있음

  cf. 마지막 공영방송 부분이 특이한데, 그 이유는 독립된 공영방송의 불편부당성이 여론 시장을 주도하면, 설사 다른 언론에서 정치 병행이 있다 해도 그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임

- "공유할 수 있는 의미의 객관적 토대가 없는 것은 정치의 병폐가 아니라 존재조건인 것"(Coleman, 2018).

3. 정치병행성

-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 병행성이 아니라 극단화임**
  - 극(단)화는 교집합이 거의 없는 두 입장이 대립하면서 의견 지형 전체가 나누어지는 경우를 말함.
  - ‘이데올로기적 극단화’: 대립이 논리적 최대치까지 확장되며, 집단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대가 생성된다. 개개의 입장은 하나의 큰 주제 내에 집합되어 있고, 그 의견끼리는 연계성이 커서 내부를 응집시키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임
  - ‘정체성–근거의 극(단)화’: 대립하는 집단 사이에는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세대, 지역 같은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음: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 북한, 역사(친일), 종교 등이 그러함

    cf. 둘이 합쳐지면서 우리에 대한 긍정보다 상대에 대한 부정이 커지는 ‘적대성’이 됨
  - 극단화의 악순환: 엘리트・미디어 등에서 시작된 ‘제도적 극단화’가 대중의 ‘잘못된 (인식에서의) 극단화’를 낳고, 이것이 다시 ‘정서적 극단화’와 ‘이데올로기적 극단화’로 이어지는게 악순환

3. 정치병행성

- **극단화와 진영론**
  - 정치적으로는 '진영론'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 병행성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이런 적대성임.
  - 언론은 '나를 믿어라,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전문가다'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와 같은 편이다'라고 주장함. 수용자 역시 정보를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나,' '어떤 언론이 보도했느냐'에 따라 믿고 안 믿는 게 달라짐
  - 사실 여부나 증거 유무보다 '얼마나 주장이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함. 자기편에 불리한 것은 가능한 다루지 않거나 상대편에서 불리한 것을 억지로 찾아내 경합시킴으로써 이른바 '물타기'를 함

cf. 의제(agenda)는 그냥 사건이나 개별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제재. 언론이 다룬 특정 사실은 하나의 '주장'에 가까운 것

cf. Agenda-Setter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Agenda-Amplifier임. Gatekeeping 못지않게 Gatewatching도 중요

cf. 진영론이 심해지면 '노회찬 부인 운전기사 보도'나 '윤석열 별장 보도'처럼 사실조차 왜곡될 수 있음. 최종 목적이 '적의 척결'에 있으므로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이 용인되는 것임

3. 정치병행성

- 이런 입장이 시장전략까지 될 수 있을 때, 이른바 '초적대주의'를 낳음. 한국의 언론시장에는 확실히 이런 수요가 있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당한 언론의 정치성은 편향인 정파성으로 전락해버림: '구조적 정파성'

- **정치 병행성과 언론의 진실 추구**
  - 정치의 장에서 자명한 진실은 없지만 서로 대립·병행하는 세력(들)이 모두 아무런 오류가 없는 완전한 상대성(Baghramian, 2015)을 갖춘 것은 아님. 적어도 어떤 시점이 되면 일시적·잠정적으로 라도 진실과 오류가 판명 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임
  - 서로 합치할 수 있는 진실 판명의 순간이 오면, 서로 다른 병행을 해오던 언론도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됨

  cf. 국정 농단과 탄핵(박근혜)의 순간

3. 정치병행성

- **언론의 상관조정/갈등관리**
  - 언론의 입장에서는 갈등을 '원칙 있게' '온건하게' 관리하는 기능도 중요함. 여기서 작용하는 원칙이란 이를테면 롤즈가 말하는 '합당성'(reasonableness) 같은 것임

    cf. 롤즈는 자유나 인권 보장 같은 합당성의 큰 테두리 안에서라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나 '자유 사회주의'(그가 이름 붙인 '주의'들이다) 등의 다양한 교리들이 얼마든지 경쟁·갈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이미 합당성으로 큰 틀의 '옳음'이 확보되었으므로 조건에 따라 경쟁해서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어느 것이든 '그름'이 되지는 않는 안전판이 있는 셈이다.
  - 온건한 관리란 갈등이 일정 수위를 벗어나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언론이 전통적인 '상관 조정 기능'(correlation function)을 발휘하는 것임(정치 병행 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될 것임)
  - 이런 옳음의 보장과 좋음의 경쟁, 갈등의 관리야말로 공정한 언론의 표상일 것임

4. 편향

- **편향은** '미디어가 (정치)권력을 의식·무의식적으로 개인과 집단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향성'
- **편향의 유형: '내용의 편향,' '왜곡 편향,' '의사 결정의 편향' 등**
  - 내용 편향은 "정부 권력의 활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에서 한 측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일관된 프레이밍 패턴."

    cf. '문제의 정의,' '인과론적 분석,' '도덕적 판단,' '해결책의 장려' 등 '문제'에 초점을 둔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엔트먼은 언론의 프레임, 곧 경향성을 도출해냄

    cf. ① '문제가 무엇이냐'; 예컨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자연 재해냐 인재냐

    ② '원인은 무엇이냐'; 정부의 잘못이냐 기업의 잘못이냐 개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체제의 구조적 문제인가, 행위적 일탈의 문제인가,

    ③ '도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누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느냐', 판단 기준이 도덕이 되면 정치는 이분법적 선악의 장으로 바뀜

4. 편향

④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이 적절한가'; 정부의 조치인가 민간의 노력인가,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가,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가능한가 등

- '왜곡 편향'은 실재를 어떤 식으로 반영(왜곡・조작)하느냐에서 발생함. 이 편향에서는 왜곡・조작의 대상을 두고 '진실'과 '실재'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됨

cf. 그러나 '논란이 없는 사실'이 언론의 프레이밍, 곧 수용자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중요다면 논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임. 여기에서도 관건은 반영/왜곡을 통해 누구의 권력이 보호받느냐임

- '의사 결정의 편향'은 '무엇'을 보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발생함. 이는 뉴스를 생산하는 개인과 조직이 체험에 의해 스스로 발견하는 휴리스틱 같은 것

4. 편향

- 뉴스가치인 '중요 관련성'(relevancy)[유관(적합)성으로도 번역된다]임. 이를 통해 언론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한계를 나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선별은 편향을 부르게 됨

  cf. 기사의 출처와 언론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결정되는 이 편향은 언론의 성격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면서 관행이나 규범·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침

- 이런 편향론에서 최근의 초점은 종전에 많았던 '왜곡 편향'보다 '내용 편향'이나 '의사 결정 편향'임

  cf. 왜곡 편향에는 논의의 준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실 여부가 쉽게 판명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데 비해, 내용 편향이나 의사 결정 편향은 지금까지는 잘 보지 못했던 텍스트적·효과 측면의 프레이밍이나 제도·관행에서 출처가 가진 구조적 권력성을 포착하게 해 줌

  eg. 이명박 정부 당시 MBC에서 최장기 파업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은 FTA 반대 시위의 보도를 둘러싼 의사 결정 편향이었음

4. 편향

- **편향의 또다른 유형화: 이스라엘 연구자 부다나의 연구(Boudana, 2016)**
  - 부다나는 인위적 균형조차 편향으로 인식해 이른바 양시론이나 양비론도 편향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그가 편향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음처럼 다양함

    ① 긍정적 당파성: A와 B가 대립할 때, A에 동조하지만 B는 거론하지 않는다(또는 A에 대한 판단만큼만 B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본다).

    ② 부정적 당파성: A를 비판하지만 B는 거론하지 않는다(또는 A에 대한 판단만큼만 B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③ 긍정적 균형: A와 B를 모두 긍정해 인위적으로 균형을 잡는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반대쪽 주장을 통해 균형을 잡는 것은 바로 이런 편향을 범한다.

    ④ 부정적 균형: A와 B의 비행과 허위를 모두 비판해 인위적으로 균형을 잡는다.

    ⑤ 부분적 균형: 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보도하면서 B는 무시한다. B는 A의 프레임을 통해 평가받는다.

4. 편향

- 이 유형화가 갖는 의의는 균형에서도 당파성만큼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임. 경쟁하는 양측에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스톱워치 균형'은 물론 가장 손쉬운 것이다. 그러나 질적 균형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어려워짐

cf. 같은 시간을 다루더라도 논조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른 '방향성의 균형'이나 다루는 주제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른 '이슈의 균형' 등을 말함. '경제/비즈니스'나 '세금' 같은 이슈는 보수에, '복지', '건강보험', '실업'은 진보에 유리함

eg. 2015년 영국 총선을 예로 들면, BBC를 비롯한 영국 방송들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이슈를 선택했지만, 보수당에 유리했던 '경제/비즈니스'를 훨씬 많이 다루었음. 이들에게 '경제/비즈니스'는 보수당적 이슈가 아니라 전 영국적 이슈였던 셈임. BBC조차 Sky보다 '이민'과 '주거' 같은 주제들을 덜 다루어 일종의 리스크 회피적 중도 노선을 취했음

4. 편향

- 균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때로 사안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위험도 있음. 대다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지구 온난화' 이론을 반대의 주장도 같이 보도해 일부러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음

cf. "특정 정당이 부정 선거를 시도했다는 훌륭한 탐사 보도가 올라오자 신경이 곤두선 데스크가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파헤치라고 기자에게 지시해" 정당 간 균형을 맞추라는 경우(Bennett, 2009, p.394)는 가장 전형적인 '물타기'일 것임

cf.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했던 온갖 거짓말과 협잡은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이메일 관리 부주의)에 의해 상쇄되면서 대다수 예상을 뒤엎었음

cf. 실제 BBC는 '적절한 무게'라는 기준으로 증거의 개별 수준을 판단해 경직된 균형이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방침을 바꾸었음. '그가 말했고, (다음에는) 그녀가 말했다'(he said, she said)는 중계 방송식 5 대 5 균형은 불편부당이나 객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5. 불공정의 최소주의적 극복: 실행규칙

cf. 특히 이는 양적 뉴스 균형이 관행화된 (공영)방송에 가장 많이 쏟아지는 비판일 것임. 그러나 매일 수많은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을 처리해야 하는 뉴스에서 어떤 당이 옳은지 '판결'해 보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그가 말했고, 그녀가 말했다'식 보도는 불행하게도 사안의 복잡성, 시간의 제한, 지식의 한계, 혼란스런 인식론적 기준 등의 제약에 갇혀 있는 언론이 택한 최선의 대안 중 하나라는 주장도 있음

- **다음의 <표>는 경향적 특징을 띨 수 있는 언론의 행위들이 어떤 타당성을 요구받는지, 어떤 윤리적 가치와 관련되고, 어떤 실행 규칙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임**
  - 여기에서 경향적 특징으로 꼽힌 예들은 참(진리 · 진실)을 기준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사실의 선택', '윤색적 표현', 그리고 '전제된 가치' 등이고, 옳음을 주장하는 의견 기사에서는 '근거 없는 의견'과 '비일관성', '불공정' 등임

5. 불공정의 최소주의적 극복: 실행규칙

<표> 언론의 경향성 극복을 위한 실행 규칙

기사 종류	경향적 특징	타당성 요구	언론윤리적 가치	언론인의 실행 규칙
스트레이트 기사	사실의 선택	사실의 범위에 대한 요구	중요 관련성과 총체성	• 배경 자료의 검색 • 관련 정보원 인터뷰
	윤색적 표현	참을 위한 표현 정당성 요구	표현의 타당성	• (불필요한 의견이나 표현을)'더하지 말 것' • 표현 근거의 제공
	전제된 가치	참을 위한 적절성 요구	전제된 가치의 적절성	• 취재 동기의 투명성 • 예상된 독자의 가치
의견기사	근거 없는 의견	옳음의 전제인 사실성 요구	의견 근거의 정당성	• 관련 자료의 수집 • 정보의 사실성 확인
	비일관성	옳음의 일관성 요구	책무성에 근거한 일관성	• 자신의 과거 주장 검토 • 상황 논리 검토
	불공정	옳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호성의 요구	이해 당사자 배려	• 당사자 목소리 반영 • 적절한 대변자 찾기

* 출처: 조항제(2019)에서 일부 수정.

5. 불공정의 최소주의적 극복: 실행규칙

- **'사실의 선택'은 여러 사건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생략했느냐를 말함. 이는 언론이 현실을 어떤 성격으로 구성했느냐, 곧 구성의 중요 관련성과 총체성(holism)을 말해 줌**
  - 만약 선택이 잘 되었다면, 언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참에 가깝게 총체적으로 보여 줄 것임
  - 한국 언론에서 나타나는 가장 많은 왜곡은 특정 대목을 전체 맥락과 동떨어지게 추출한다거나 이를 따옴표로 인용해 제목으로 쓰는 경우임.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진실과는 오히려 반대될 수도 있는 것임

    eg. <조선일보>가 자신에 대한 반대운동(안티조선 운동)을 자초했던 사건도 <월간조선>이 김대중 정부 당시 최장집 국정기획위원장의 글에서 떼어 온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란 말 때문이었음
  - 이는 인위적으로 만든 불일치, 사익을 위해 언론이 벌인 '제조된 논쟁'의 전형임. 이런 만들어진 논쟁은 실체적 근거 없이 제도에 대한 불신과 대중의 혼란을 조장함. 이런 '나쁜 매너'야말로 한국 언론을 정파적으로 만든 주범임

5. 불공정의 최소주의적 극복: 실행규칙

- **'윤색적 표현'에서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는 독자(시청자)들의 주의를 얻기 위해 윤색이 필요했다면(불가피한 강조이나 미화, 표현적 수단을 활용했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띠는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임**
  - 이를테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윤색은 특정한 의도를 위한 왜곡과는 완전히 다를 것임. 반대로 스트레이트 기사에 부적절한 정치적 주장이나 단정적 추측을 섞는다면 이 역시 참과는 거리가 멀 것임

    eg. '온 적이 있는 거 같다'는 조사서 문구를 마치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표현("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하는 것은 부정확을 넘어 거의 픽션에 가까운 것임

5. 불공정의 최소주의적 극복: 실행규칙

- **'전제된 가치'에서는 앞서의 사실 선택이 어떤 이유(가치)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이유의 적절성을 따져보고자 하는 것임**
  - 윤색이나 왜곡이 가장 참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사건을 선택·의제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가치가 과연 정당한가임
  -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가치를 마치 거역할 수 없는 것인 양 전제하는 행위 역시 지극한 편향중 하나임. 비리나 범죄와 가치 비판은 다름. 한국의 주류 언론은 은연중에 친기업, 친개발, 친경쟁(력), 친중산층, 친서울, 친(첨단)테크놀로지 등을 강조함

    cf. 한국 언론이 기업 비리에 유난히 약한 점은 이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음. "기업 활동에 대한 비판 및 감시"는 한국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행은 가장 잘 못하는 것임

5. 불공정의 최소주의적 극복: 실행규칙

- **의견 기사에서는 '근거 없는 의견'과 '비일관성', '불공정'을 경향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음. 의견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는 사실로 입증되거나 과거의 검증된 지식(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좋은 토론은 각 주장에 근거의 유무, 근거의 적실성 여부가 드러나게끔 해서 청중이나 참여자에게 올바른 결론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임. 그런 식으로 모든 토론이 진행된다면 참여자들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가 점점 어렵게 될 것임. 숙의 민주주의자들이 꼽는 중요한 숙의성의 조건도 '이유를 제시하는'(reason-giving) 정당화임

  cf.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가'

5. 불공정의 최소주의적 극복: 실행규칙

- **'비일관성'은 상황에 따라 주장이 바뀌면서도 바뀐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임**
  - '내로남불'은 언론이 주로 정치를 비판할 때 많이 쓰지만, 실상은 스스로도 자주 범하는 대표적 오류임
  - 일관성은 자신이 했던 주장이 지금 달라졌다면 이유를 제시하는 책임성 또는 합리성을 갖게 함. 정치 병행성 속에 있는 한국 언론은 자신과 연합한 정파를 위해 자주 자신의 종전 주장을 뒤집으면서도 이런 변화를 설명하지는 않음(그래서 여야가 바뀌면 태도도 정반대가 됨)

    eg.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제가 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이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임.<조선일보>(2022. 6.15)는 방통위원장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따로 내기도 했음(의사결정 편향의 가장 전형적인 예임). 제도 개선이 선결적 요건이란 걸 충분히 알면서도 일단 공격하는 의미로 '**청부보도**'를 한 것임
  -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언론을 수용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노릇임. 이런 일관성과 근거 제시는 챔버스가 제시한 숙의의 두 가지 원칙 중 하나에서 '지성적인 것'(intelligible)에 해당함

5. 불공정의 최소주의적 극복: 실행규칙

- **'상호성' 또는 '포용성'이 챔버스의 다른 원칙인데, 경향성의 세 번째 사례인 '불공정'은 이를 어기는 것임**
  - 특히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은 언론 경향성 중에서 가장 큰 해악으로 꼽힘 이때의 불공정은 일방성이나 배제성임
  - 이해 당사자가 명료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사회 전체가 될 수 있을 때는 적절한 대변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공정성 행위 중 하나임. 언론 역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수용자를 대리(표)해서 말해주는 측면을 갖기 때문임(저널리즘의 '수탁모델'; trustee model)
  - 적대가 위주가 될 때, 가장 쉽게 자행되는 것이 아마도 이 불공정일 것임

- **요약하면,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주장하고, 같은 편과 다른 편을 구분해 일관성 없이(그때그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편의적으로 적용하며, 다른 편이라고 해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거나 무시해버린다면, 그런 언론은 극복해야 할 경향적 또는 편향적 언론이라 할 수 있음**

6. 공정성과 미디어 정의

- **'선진국' 한국은 언론에 대한 신뢰가 주요 국가 가운데서도 최하위권이며, 반면 이념 · 계층 · 지역 · 남녀 · 종교 등 사회의 거의 전 부문에서 갈등이 최고이며, 불평등 수준 역시 최고인 나라임. 심지어 불평등을 선호(인정)하는 비중도 과반(57%)을 넘는 나라임(불평등의 체제內화). 반면 갈등관리는 최하위권인 나라임**
  - 상관조정기능을 가져야 하는 언론을 비롯해 공정성이 항상 논의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에 모든 문제가 집약되는 만큼 이의 외연 또한 클 수밖에 없는 나라
  - 정치와 언론이 동반으로 악순환, 불신의 연쇄를 일으키는 나라

- **언론의 공정성 역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개의 기준이 동시에 구현되어야 확보될 수 있는 '복합적 판단의 결과물'이자 민주주의나 정의처럼 늘 논쟁을 부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임**
  - 사실성(팩트), 중요 관련성, 투명성, 불편부당성, 다양성, 균형성, 중립성, 반편향성, 본래성 등 다른 언론의 가치나 준칙과 두루 관련을 맺음

6. 공정성과 미디어 정의

- **미디어정의는 공정성의 가장 적극적이면서 최대적인 이념임. 미디어정의는 미디어에 의한, 미디어를 통한 (사회) 정의의 추구이고[justice by(through) media], 미디어 스스로 정립하는 내적 정의임(justice in media)**
  - 이 정의는 실질적 평등성(equity)을 가장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임
  - 언론인 이대근(2009)이 비유로 말한, “수평 저울의 양측이 길이와 무게가 다를 경우, 추의 균형점이 중간이 될 수 없는 것”(p.71)은 이에 잘 어울림. 추(기준)를 옮겨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약자를 위한 보상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뜻임